Vol. 30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7. 7. 31.

▌정책동향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등

▌아젠다발굴

- **현안분석** ▌ 주요 국가 농업 및 직불제 예산과 시사점
- **[기획] 새 정부 동향** ▌ 새 정부, 8개 부처 조직개편 완료
- **언론 동향** ▌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농업계 주요 동향 등

▌해외단신

- OECD-FAO 농업전망 (2017~2026)

▌국내단신

- 우리나라 경제전망 (2017~2018)

▌연구지원

- 2017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등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

정책동향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자료 : 기획재정부(2017.7.25.)

❑ 개요

○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개최, 7.25.] 정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확정·발표하였으며,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4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

※ 정부는 앞서 열린 당정협의(7.24.)에서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는 추격형 성장에서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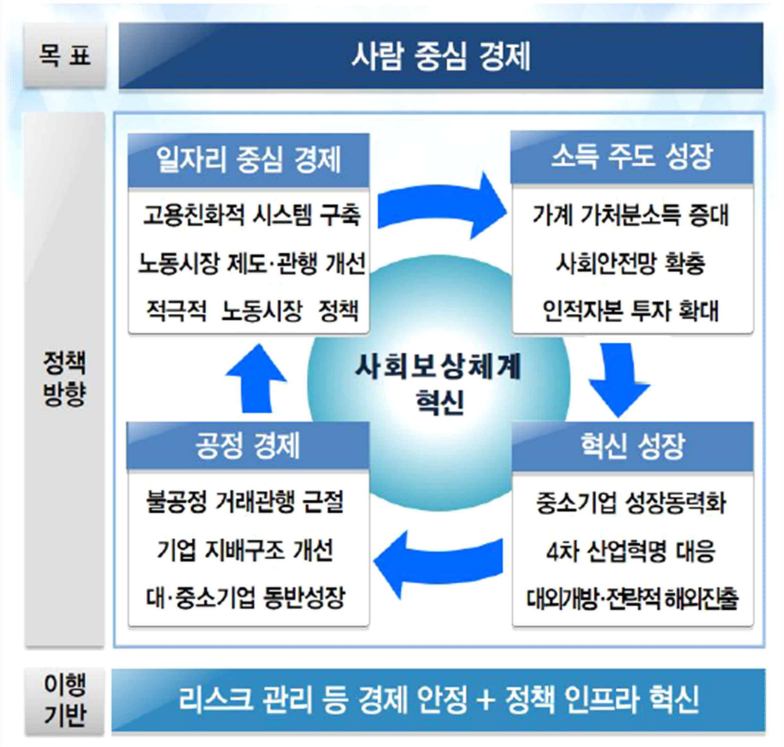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 저성장-양극화 동시 극복을 위해 경제 패러다임 大전환

○ 경제성장을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중심·소득주도 성장,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성장의 쌍끌이 방식으로 전환

○ 경제체질을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해 공정경제로 전환하여 성장의 과실이 경제전반으로 골고루 확산 유도

⇨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



정책동향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사람 중심 경제」

○ [1. 소득 주도 성장]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

- 가계-기업, 가계 간 소득 격차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미비로 사후적 격차 축소 기능도 미흡, 그 결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비위축으로 성장에도 부담

> ⇒ 가계를 분배 객체 → 성장 주체로 인식 전환, 소득증대 노력 강화

○ [2. 일자리 중심 경제]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복원

- 제조업 해외이전 가속화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관행·제도로 인해 일자리 질 악화

> ⇒ 성장과실이 가계로 전달되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 [3. 공정경제] 경제주체 간 합리적 보상체계 정립

- 공정경제 정착이 더딘 것은 폐쇄적인 거버넌스 구조, 이권 추구(rent-seeking) 형태※, 사회적 자본 부족 등이 원인

※ 이익집단 등의 경쟁을 가로막는 이권추구 행태가 정부 규제 등에 의해 보호

> ⇒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사회보상체계 혁신

○ [4. 혁신 성장] 3% 성장능력 갖춘 경제 유지

- 과도한 규제나 관행 등이 융복합 등 창조적 파괴를 제약, 고용의 80% 이상 차지하는 중소기업도 혁신역량 약화

> ⇒ 경쟁제한적 제도혁신, 혁신 중기육성 등으로 생산성 중심 경제 전환

❑ 주요 과제

○ [1.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 구축 → 실업 두려움 없는 사회] 사회적 타협을 통해 노사상생, 포용적 일터혁신 추진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 노동시장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
⇒ △실업안전망 강화, △직업교육훈련 혁신: 평생능력개발·경력설계 지원 강화

○ [2. 빈곤층 소득지원 강화 → 더불어 사는 사회]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근로빈곤층 지원으로 EITC 지속 확대

○ [3. 도심내 공적임대 대폭 확충 + 주택파이낸싱 시스템 개편]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도심내 직주근접 임대주택 5만 호 확충, △Sale & Leaseback 방식 한계차주 주택매입※

※ 주택도시기금, LH, 주담대 취급은행 등이 출자하여 리츠를 설립, 한계차주는 주택(주담대)을 리츠에 매각 후 해당주택에 임차하여 거주 → 임차기간(5년) 종료 후 에는 재매입 가능

정책동향

○ [4. 지역일자리 만드는 기업 최우선 지원 - 골고루 잘사는 사회] △투자유치제도(지방이전 기업, 외투, 유턴) 통합 → 고용효과 중심 재설계, △지역별 일자리창출 거점을 구축하고 세제·금융 등 집중 지원

○ [5. 교육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추진 → 사회적 이동성 복원] △저소득층의 공교육에 대한 소요비용을 촘촘히 지원, △우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4차 산업혁명 대비 평생교육 예산 지속 확대

○ [6. 개별기업 지원 →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 전환] △수평적 네트워크: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 구현, △상생형 네트워크 밸류체인에 기여한 만큼 성과 보상, 동반 성장(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통해 뒷받침), △개방형 네트워크: 글로벌 시장확보 및 경쟁력·자생력 제고

○ [7.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사회통합형 성장 모델로 육성] △전 부처의 사회적경제 정책 조정·시행 위한 추진체계 및 전담조직 신설, 사회적경제기본법 정부 대안 마련 등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확보 위한 초기지원 강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규모화 촉진, 국민인식 제고 위해 평생학습도시를 사회적경제 학습기반으로 활용

※ 일반 협동조합-개별법상 협동조합(농협·생협 등)간 연합회 설립 허용 등 규제완화 → 협동조합간 연대·협력 유도(현 일반 협동조합간 연합회 설립만 허용)

○ [8.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 → 혁신 창업국가 도약]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선도분야 선정, 패키지 방식 지원,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 →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육성

○ [9.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 좋은 일자리 창출 저변 확대] △新 유형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및 R&D 등 지원 강화, 제품 기획·생산단계에서 제조업-서비스 융합 강화, △IT·SW 활용 등으로 저부가서비스(음식·숙박 등) 경쟁력 제고

○ [10. 新 통상전략 수립 →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주도] △FTA 네트워크 확대 등 새정부 통상전략 수립, △전략적 글로벌 시장 확보 및 중기·청년의 해외진출 강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1. 소득 주도 성장	
①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	•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한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달성 지원 – 영세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카드수술료 인하, 공정질서 확립 등 경쟁력 제고 추진 •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 주거: 연17만 호 공적임대주택 공급으로 OECD 평균 이상 공적임대주택비율 달성(6.3 → 9%) 및 운영관리체계 개선 – 의료: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추진(2015년 63.4%)

정책동향

구분	주요 내용
	– 교통: 수도권 출퇴근시간 30분 단축, 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 통신: 요금감면제도 확대, 경쟁활성화로 통신비 인하 유도 – 교육: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②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취약 가구의 적정소득 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EITC 지속 확대 등을 통해 소득분배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 '한국형 고용안정 · 유연모델' 을 구축하여 실업안전망 대폭 확충, 노동시장 역동성 회복을 양질의 일자리창출 기반 강화 • 저출산 · 고령화 극복기반 강화 및 국민의 기본ㅅ냉활 보장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제도 운영 – 유년: 0~5tp 아동수당 월 10만 원 지급 –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급(2018: 30만 원, 3개월 → 2019: 50만 원, 6개월), 향후 저소득 근로빈곤층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2018: 25만 원 → 2021: 30),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검토,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및 단가인상 – 장애인: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등 비장애인과의 격차 축소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등 *– 농어업인: 선제적 수확기 쌀 수급안정, 생산조정제 한시 도입, 공익형 직불제 확대 · 개편,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지원 확대*
③ 인적자본 투자 확대로 가계 소득의 근원적 기반 강화	• 경쟁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인재 육성 •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강화 등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4차 산업혁명 대비 평생교육 예산을 지속 확대하여 저소득층 평생학습 바우처 신설, 중기 재직자 계약학과 지원 확대
2. 일자리 중심 경제	
① 고용 친화적 경제 · 사회 시스템 구축으로 고용 없는 성장 극복	•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 위원회 설치, 일자리상황판 운영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 예산 · 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 예산: 고용영향평가 강화 및 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배분 – 세제: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 등 고용중심 세제 개편 ※ (고용증대) 고용증가에 비례한 기업 세액공제(최대 2년간) 신설 ※ (비정규직) 중기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시 법인세 세액공제 대폭 확대 ※ (임금인상)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 조정 등 – 정책금융: 고용실적에 따른 금리우대 · 이자환급 강화 • 공공부문이 모범고용주로서 선도적 역할 강화 – 국민안전 · 치안 · 복지 · 교육 분야 공무원 일자리 대폭 확충 –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대폭 확충하여 보편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0세 이하, 노인) 등 보건복지전달체계 혁신 – 상시 · 지속, 생명 ·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임금수준 공시 등 단계적 처우개선 추진
②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제도 · 관행 개선으로 일자리 질 제고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상시 · 지속업무 등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방안 마련 • 하청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 · 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 → 52),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 사업장 지도 · 감독 강화로 1,800시간대 근로시간 실현 •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중대 재해 발생 시 처벌 강화 등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정책동향

구분	주요 내용
③ 사회가 함께 만드는 일자리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 적극적 노동시장에 대한 재정투자를 총 재정지출 증가율 이상 지속 확대 •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유망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혁신 • 공공취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고용복지센터 확충, 취업상담인력 충원,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노력 확대 • 청년 · 여성 · 신중년 등 성별 · 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④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 상생 ·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중앙-지방, 다양한 이해 관계자 참여 등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정비 • 취약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고용형태 다양화 등 새로운 노동시장 수요 반영을 위해 노사관계 법 · 제도 개선 추진 •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예: 광주) 확산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 ·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3. 공정 경제	
①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로 공정한 성장기반 강화	•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문제 해소 위한 '을지로위원회' 설치 추진 • 하도급 · 가맹 · 유통 · 대리점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집행 강화(2017년~) •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공정위 전속고발권 개선, 조사권 일부를 지자체와 분담 등 불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
② 담합 행위 근절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독과점을 야기하는 각종 진입규제 전면 재점검 • 담합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과징금 상향, 공익 신고자 보상금 한도 확대(20억 원 → 30) 등 선진국 수준으로 제재 강화 •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원 조성방안 마련
③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과도한 경제력집중 완화	• 일감 몰아주기 규제 · 과세 강화 등 총수일가 편법적 지배력 차단 • 금융계열사를 통한 잿배력 강화 방지를 위해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 소액주주의 경영권 견제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 전자투표제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추진 •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산으로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
④ 동반성장 촉진 및 골목상권 보호 강화	• 협력이익배분제, 대기업 유통망 공유 등 다양한 동반성장 모델 발굴 · 확산,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통해 지원 ※ (협력이익배분) 대기업 이익→ 중소협력사 공유 · 출연 시 세액공제 ※ (상생협력기금)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 확대 ※ (성과공유) 기업이익을 근로자와 공유 시 세제지원 방안 강구 ※ (상생결제)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 → 중견기업까지 확대 •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및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 영업제한,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의 30%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 • 소공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화 · 협업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과밀업종 종사자 재취업 · 재창업 지원
⑤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정부대안 마련, 사회적경제 정책조정 ·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전담조직 구축 추진 • ***사회적경제가 시민경제 및 농어촌 등 지역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태계조성 지원*** –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 완화 등 사회적경제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 – 사회적경제 학습체계구축 등 인력양성 로드맵 수립

정책동향

구분	주요 내용
	– 공공조달 가점제도 · 대기업 연계 유통 등 판로확대 지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규모화 촉진 –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휴 국공유 시설 활용 위한 제도 개선 – 도시재생분야 진출 지원(2017년), 지역 일자리사업과 연계를 강화(2018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도
4. 혁신 성장	
① 협력 ·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화 촉진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및 지원사업 유사중복 등 조정기능 강화 • 수요자 · 공급자가 어우러져 기존산업 경계를 뛰어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참여형 혁신 · 융합공간(Creative-lab) 구축 • Rent 배분체계를 '직접지원 → 인프라 · 협력생태계조성' 전환 •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네트워크화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복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축소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성장 단계별(창업-성장-회수-재도전) 지원으로 혁신창업 활성화, 기술창업자 5.6만 명, 재창업자 5.5천 명 육성
② 경제 · 산업 등 전 영역에 걸쳐 4차 산업혁명 대응 태세 강화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8월)하고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체계 수립(3/4분기) • 혁신적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초지능 · 초연결 기반 구축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제조-ICT-서비스 융합, 리쇼어링 등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 육성 *– 스마트농업: 20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천ha, 축산 5천 호 보급,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등 영농창업 활성화* •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 균형발전 촉진 – 혁신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지역인재채용 할당제 도입,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등 지원 – 14개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선정 및 신산업 테스트베드 조성,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 강화 – 도시재생과 연계, 창업 · 혁신공간, 문화 · 복지공간이 어우러진 산업단지 혁신 2.0 추진
③ 포용적 대외개방 확대, 전략적 해외진출 추진	• 보호무역주의, NEXT CHINA 대비 새정부 통상전략 수립 – 아세안 · 인도와의 기존 FTA 고도화 등 거대 신흥시장과 맞춤형 경제협력 강화, 신규 FTA 협상 적극 추진 – 통상 선진국가간 공조, G20 · ASEM · APEC · WTO 등을 활용하여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 • 인도 · 아세안 · 일본 · 러시아 등을 동북아플러스 중점 경제협력국으로 선정하여 대외경제협력 역량 집중 • 중소 · 중견기업 수출비중 40% 이상 확대, 청년 해외진출 촉진 – 국가브랜드 전략과 산업 · 무역정책을 연계한 'Korean-Made 전략' 수립 및 맞춤형 지원 강화로 수출기업화 촉진 –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수입하는 해외기업에 융자지원하는 견인금융 출시(2018년까지 1조 원) – K-Move센터 재정비, 국제금융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확대 등 해외일자리 지원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위기경보 '심각' →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7.27.)

○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7.27.] 지난 6월 6일 발령한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7월 28일자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

※ (위기경보 단계)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6월 19일 이후 AI 발생이 없고, 가금거래상인에 대한 점검·검사와 오리 일제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으며, 전국 방역 지역이 7월 28일 모두 해제되는 점을 고려

- '주의'로 조정된 이후에도 종전 AI 특별방역대책기간(2016.10~2017.5월)에 준한 방역조치를 실시

RCEP 제19차 공식협상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7.7.21.)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9차 공식협상 개최, 7.24.~28.], 인도 하이데라바드] 상품최종공통양허 목표, 서비스·투자 자유화 기준 등 최대한 접점을 찾고, 협상 전반에 걸쳐 올해 성과 도출 방안 논의

※ RCEP 정상성명(2016.9월): 균형 잡힌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의 '조속한 타결' 지침 제시

- 한편, 상품·서비스·투자 후속 양허안·유보안을 바탕으로 시장접근 협상을 심도 있게 진행하고, 지재권·위생검역(SPS)·원산지 등 규범 개선 노력을 병행

미국 파리기후협약 탈퇴선언에 따른 통상정책 방향 논의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7.7.20.)

○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제3차 선진통상포럼※ 개최, 7.21.] 美 파리기후협약 탈퇴선언※※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한미 경제협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며, 경제에 미칠 영향과 통상정책 방향을 논의

※ 정부·학계·경제계 통상전문가들이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

※※ 지난 6.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협약 탈퇴를 선언

아젠다발굴 주요 국가 농업 및 직불제 예산과 시사점 등

현안분석 주요 국가 농업 및 직불제 예산과 시사점

※ 유찬희 외(2016) 등을 참고하여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작성하였습니다.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농업·농촌 분야

○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농업·농촌 분야 과제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목표)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전략)에 제시되었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7.19.)

- 구체적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과제 81),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과제 82),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과제 83)에서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음.

○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중 핵심 내용은 농산물 수급 안정, 공익형 직불제 개편, 재해대응임. 이 중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함.

- 친환경농업직불제 단가 인상(2018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등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음. 2022년까지 밭고정직불제·조건불리지역직불제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 해당 내용은 농정 공약 중 직불제 개편 방향과 일치함. 농정 공약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여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 지원 등을 제시하였음(이명기·유찬희 2017).

❑ 농업 및 직불제 예산: 국가 간 비교

○ 직불제는 농업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음. 따라서 직불제를 개편하고자 하면 정책 수단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와 조정이 불가피함.

○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농업 및 직불제 예산 현황을 정리하여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아젠다 발굴

▌국가별 직불제 예산 등 비교(2012~2014)▐

국가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한국	국가 전체 예산		조 원	323	338	348
	농림 예산(본청+기금)		억 원	136,778	140,431	143,681
	직접지불금		억 원	10,016	10,511	12,924
	농림 예산 대비 비중		%	7.3	7.5	9.0
	농가 수		천 호	1,151	1,142	1,121
	농가소득		천 원	31,031	34,524	34,950
	농업소득		천 원	9,127	10,035	10,303
	호당 직불금		천 원	870	920	1,153
	직불금/농가소득		%	2.8	2.7	3.3
	직불금/농업소득		%	9.5	9.2	11.2
일본	국가 전체 예산		억 엔	913,446	939,003	924,409
	농림 예산		억 엔	21,727	22,976	23,267
	직접지불금		억 엔	10,623	7,778	7,536
	농림 예산 대비 비중		%	48.9	33.9	32.4
	농가 수(가족경영체)		천 호	1,532.7	1,482.4	1,439.1
	농가소득(가족경영체)		천 엔	4,762	4,727	4,562
	농업소득(가족경영체)		천 엔	1,347	1,321	1,186
	호당 직불금		천 엔	693	525	524
	직불금/농가소득		%	14.6	11.1	11.5
	직불금/농업소득(직불금 제외)		%	51.5	39.7	44.2
EU	국가 전체 예산		백만 유로	148,049	152,502	121,435
	농림 예산	EAGF	백만 유로	43,969.6	43,654.7	43,778.1
		EAFRD	백만 유로	14,617.0	14,817.0	5,299.0
	직접지불금		백만 유로	40,510.7	40,931.9	41,447.3
	농림 예산 대비 비중		%	69.1	70.0	84.5
	농가 수		천 호	–	10,841.0	–
	농가소득		유로	38,547	37,025	–
	농업소득		유로	19,609	17,903	–
	호당 직불금		유로	–	3775.7	–
	직불금/농가소득		%	–	10.2	–
	직불금/농업소득(직불금 제외)		%	–	26.6	–
스위스	국가 전체 예산		백만 CHC	65,786	67,313	67,521
	농림 예산		백만 CHC	3,711	3,706	3,693
	직접지불금		백만 CHC	2,791	2,798	2,774
	농림 예산 대비 비중		%	75.2	75.5	75.1
	농가 수		천 호	46.0	45.0	43.8
	농가소득		CHC	82,736	88,513	94,119
	농업소득		CHC	55,965	61,386	67,806
	호당 직불금		CHC	60,666	62,232	63,339
	직불금/농가소득		%	73.3	70.3	67.3
	직불금/농업소득		%	108.4	101.4	93.4

아젠다 발굴

국가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미국	국가 전체 예산	십억 달러	4,029.9	3,953.1	3,907.0
	농림 예산	십억 달러	140.0	156.0	149.0
	SNAP	십억 달러	80.4	84.1	88.8
	농림 예산(SNAP 제외)	십억 달러	59.6	71.9	60.2
	직접지불금	십억 달러	10.6	11.0	9.8
	농림 예산(SNAP 제외) 대비 비중	%	17.8	15.3	16.2
	농가 수	천 호	2,043	2,045	2,053
	농가소득	달러	111,524	121,120	134,165
	농업소득	달러	25,038	30,639	31,025
	호당 직불금	달러	5,204.4	5,379.9	4,757.3
	직불금/농가소득	%	4.7	4.4	3.5
	직불금/농업소득(직불금 제외)	%	26.2	21.3	18.1

주: 1) 빈칸은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임.
2) EU 예산은 집행위원회 안과 의회 안 중 집행위원회 안을 기준으로 하였음.
3) 일본의 '가족경영체'는 농업생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연간 30만 엔 이상) 중 가구원이 농업경영을 하는 경영체로, 개별 법인경영체를 포함함.
4) 2015년 일본 정부 전체 예산총액은 OECD 자료가 없어 재무성 자료를 사용하였음.
5) 일본의 농업소득에는 직불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직불금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직불금/농업소득)이 과소계상 될 수 있음.

자료: 1) 공통: OECD STAT.
2) 한국: 통계청;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e-나라지표(http://index.go.kr).
3) 일본: 재무성, 予算書・決算書データベース; 농림수산성(www.maff.go.jp/j/budget).
4) EU: EU Commission(각 연도) EU Financial Report; EUROSTAT; EU FADN.
5) 스위스: 연방통계청(http://www.bfs.admin.ch/bfs/portal/en/index.html).
6) 미국: 농무부, 각 연도, Budget Summary and Annual Performance Plan; USDA ERS, Principal Farm Operator Household Finance.

출처: 유찬희 외(2016), pp. 50-51.

○ 대상 국가 전체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2013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직불금 예산 규모나 호당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 주요 직불제 시행 국가에 비해 낮음.

시사점

○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공익형 직불제 중심으로 체계를 재편하는 방식은 타당하다고 판단함.

○ 개편 과정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과제가 있음.

- 직불제 예산 규모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 직불제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농업 예산 전반 확대 또는 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함.

아젠다 발굴

- 직불제 내부적으로도 쌀변동직불제 등 **경영안정형 직불제**와의 **관계 재정립**, **현행 직불제 조정·통합 등 간소화, 직불제 단가 조정** 등을 함께 추진하여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공익형 직불제**에서 고려해야 하는 **공공재**의 **지역성**(public goods)을 **감안**하면 **지역별**로 **단가나 시행 방식**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이는 **지방분권 강화**와 **맞물려 진행**될 수 있는 부분임. 예를 들어, **일부 직불제**를 **'목적 특정형' 직불제**로 **개편**하고, **중앙정부**는 **목적만 제시**하고 **포괄보조금**을 **지급**한 뒤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추어 **집행·관리**할 수 있음(이정환 외 2017).
-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함. 예를 들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음.

참고자료

유찬희·박준기·김종인·박지연. 2016. 직접지불제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연구(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880.

이명기·유찬희. 2017. 신정부의 농정 공약과 시사점. 농업·농촌경제동향, 2017 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환·권태진·김용택·김윤식·김태균·김태연·김한호·박성재·오현석·임정빈. 2017. 신농업·신농정으로 가는 길. 시선집중 GSnJ 제241호. GSnJ Institute.

[기획] 새 정부 동향 새 정부, 8개 부처 조직개편 완료

※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2017.5.10.)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2017.5.22.)을 시작으로 새 정부의 정책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고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 새 정부, 8개 부처 조직개편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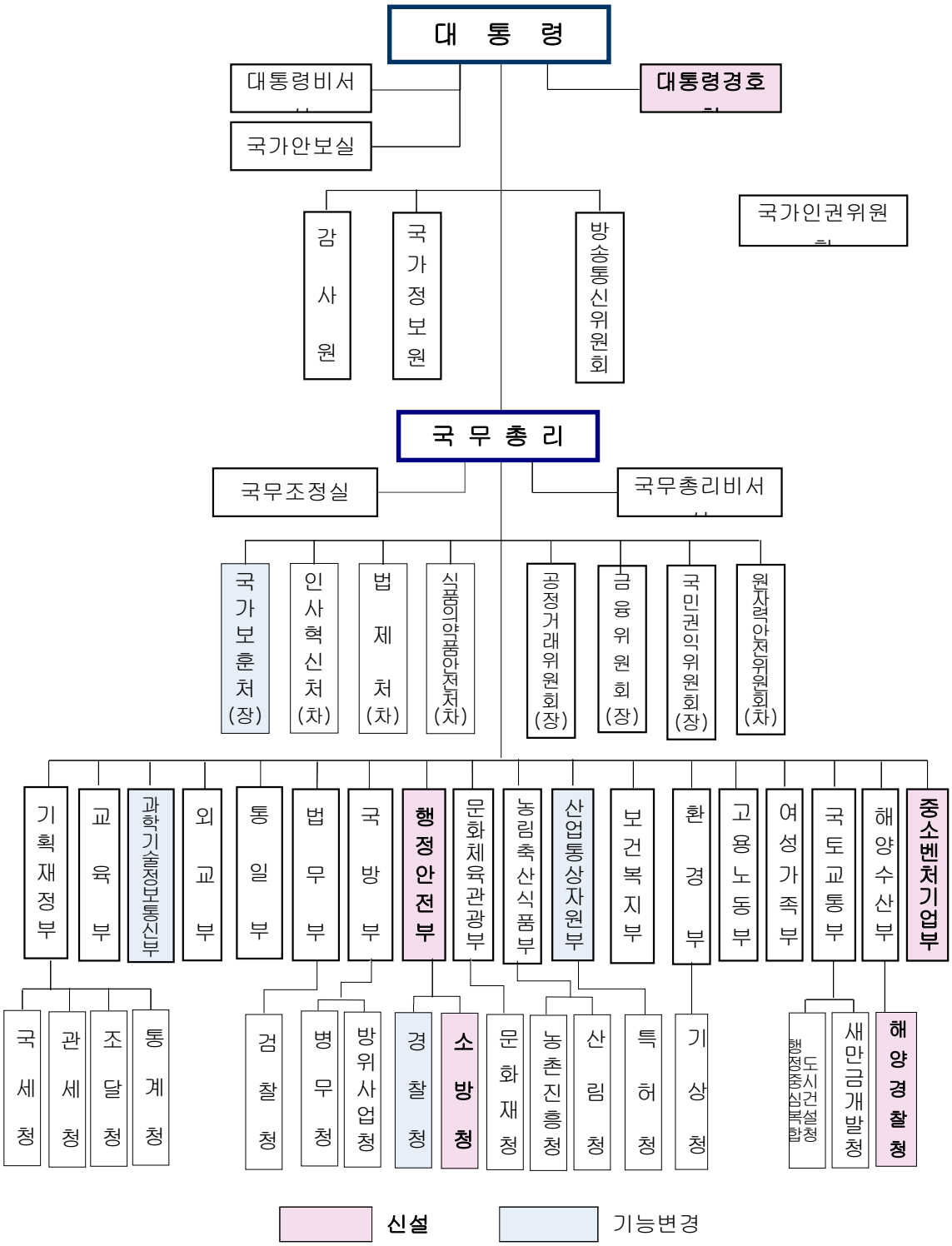
○ **[7.26일,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출범]** 행정자치부, 국무회의(7.25.)에서 국회에서 통과(7.20.)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개편**되는 **부처별 직제**를 **포함**한 **대통령령(11개)** 등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해, **7월 26일 공포·시행**

-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조기 국정안정**을 위해 **개편**의 **폭**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의 주요 **국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

◈ 중앙행정기관 : 51개 → 52개 (+1개 / +1부 +1청 △1실)
☞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51개) ⇒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52개)

아젠다 발굴

▌개편 후 정부조직 기구도▐



자료: "새 정부, 8개 부처 조직개편 완료"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7.7.25.)

아젠다 발굴

언론 동향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농업계 주요 동향 등

※ 아젠다 발굴을 위해 농업전문지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농촌 관련 쟁점 및 이슈,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하고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농업계 주요 동향

○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농업분야 3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7.19.)한 가운데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전략으로 제시한 **농정과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 **(대선 농정공약 제외)**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 'GMO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 강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과일을 후식, 간식으로 제공', '여성농업인용 농기계 보급 확대',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 **(과거 정책 답습)** '돌아오는 농촌' '살고 싶은 농촌' 이런 테마는 과거 YS 선거공약, MB 선거공약이기도 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빌려와 이명박-박근혜 방식으로 6차 산업 스마트팜 정책 제시

○ [농업계] **농업관련 과제**는 **농민단체들**이 **제시한 의제**를 **일부 수용**한 반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이 **미흡**, **'쌀 목표가격 인상' 제외**,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소요예산 178조 원 중 농업분야**에는 **1조1000억 원(0.5%)**만 배정되는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 실천의지**가 **미약**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서, 7.20.)**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 미흡", "**대통령 직속 농특위**와 민관 협치 농정 체제인 **농어업회의소 조기 출범, 국가·지역 단위 푸드플랜**의 **내실화**를 통해 **'농업인과 국민이 함께 하는 진정한 국민농업, 통일농업'**을 반드시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 주장

-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7.20.)** "**쌀 목표가격 인상 제외, 농지법 개정**을 통한 **농지개혁 없어**졌고, **농업산재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것도 **후퇴**", "100대과제에 투입할 예산 178조 원 중 **농업관련 국정과제 예산**(농업분야 1조 1,000억 원으로 0.5%만 차지)이 **부족**", "**농업과제**를 **새롭게 설정**해 농업의 근본적 변화에 나서달라" 고 요구

자료: "새정부 농정, 과거 답습에 그쳐" (농업인신문, 2017.7.21.), "[김영하의 농본 칼럼] 100대 국정과제 속 농정과제, 어떻게 봐야 하나" (농축유통신문, 2017.7.21.), "100대 국정과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담보 못한다 농업계 목청 고조" (한국농어민신문, 2017.7.21.), "문재인정부, 공약만도 못한 농업분야 국정과제 발표" (한국농정신문, 2017.7.21.), "[이상길의 시선] 문재인 농정, 이전 정부와 뭐가 다른가?" (한국농어민신문, 2017.7.25.)

아젠다 발굴

❑ 한·미 FTA 재협상 아닌 수정 미국 입장 재확인

○ [한·미 FTA 재협상 아닌 수정 미국 입장 재확인] 마크 네퍼 주한 미국대리대사, '제42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특별강연※에서, "최근 한·미 FTA와 관련해 지난주 명확하게 재협상 아니라는 입장 밝혔으며,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해 개선과 수정을 원한다"는 미국 입장 재확인

※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42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한미 경제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리대사, 한미 FTA 관련 언급 내용〉
◈ "양국 간 현저한 무역 불균형(significant trade imbalance)이 있고, 그것은 해결해야 한다"
◈ "한·미 FTA가 처음 타결됐을 때는 전자상거래 등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개선될 여지가 있고, 양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자료: "마크 내퍼 대리대사 한미 FTA 재협상 아닌 수정"(경향신문(2017.7.21.),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대한상의 강연서 입장 재확인"(세계일보, 2017.7.21.), "미대대사 대리 무역불균형 해결해야…FTA, 재협상 아닌 수정"(연합뉴스, 2017.7.21.), "한미 FTA 재협상 아닌 수정 내퍼 대사대리 미 입장 재확인"(파이낸셜뉴스, 2017.2.22.)

❑ 정부, "한·미 FTA 개정 협상, 서울에서 열자" 역제안

○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USTR 공동위 개최 요청에 답신 발송, 7.24]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함을 알리면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 △개최 장소는 서울, 개최 시기는 우리 정부 조직개편 완료 이후 가까운 시점에 개최할 것을 제안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USTR 공동위 개최 요청에 답신 언급 내용〉
◈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경제 통상관계를 확대하고 균형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해나갈 용의가 있다"
◈ "한국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등 한국 정부조직 개편이 진행 중임을 고려해 달라"
◈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안했던 대로, 한미 FTA 발효 이후 효과에 대해 양국이 공동으로 조사, 연구,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

자료: "산업부, 미국 USTR 공동위 개최 요청에 답신(答信) 발송"(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7.7.24.), "정부 한미 FTA 공동위, 조직 개편 뒤 서울에서열지", "정부 한미 FTA 관련 회담 서울서 열지", "정부, 美 무역대표부에 한미 FTA 개정협상 서울서 하자", "산업부, 美에 답신…공동위 개최해 한미 FTA 효과 분석하자", "한미 FTA 개정 요구에 조사 역제안… 차질한 물밑 협상 예고"(KBS, 동아일보,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2017.7.25.)

해외단신 OECD-FAO 농업전망 (2017~2026)

❑ OECD-FAO 농업전망 (2017~2026)

○ [대상국가] 세계

○ [자료출처]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7~2026" (2016.7.10.)

○ 농업전망은 OECD와 FAO의 공동작업으로 주요 농산품(agricultural commodities, 수산포함)의 향후 10년간의 소비, 생산, 가격 및 무역을 전망

- 매년 특별 章으로 특정 지역(금년은 동남아시아)을 선정하여 분석

〈세계 전망〉

○ [세계농업 전망] 지난 10년간 곡물 등 농산품의 충분한 재고 확보로 국제가격이 폭등 이전인 2007~2008년 수준에 근접 예상

- (소비) 중국 수요 정체 등으로 1인당 주요 식품 소비증가는 정체되고 식물성오일, 설탕, 낙농품(인도, 파키스탄) 등 일부 품목 증가 예상, 육류(meat)는 식습관, 저소득, 공급제약으로 국가 간 심각한 차이를 보임.

  ※ 2026년 1인당 평균 열량 소비가 최빈국은 2,450kcal에 도달하고, 개도국은 3,000kcal 초과 전망

- (생산) 곡물은 연평균 1%씩 생산이 증가하며 낙농품(특히, 우유※), 가금류 생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육류는 2026년에 총 40백만 톤 생산이 증가하고, 가금류(15백만 톤), 돼지(8백만 톤), 소고기, 양고기 순

  ※ 우유 생산이 인도와 파키스탄에 의해 빠르게 증가하고, 수산양식이 수산물 생산의 증가를 주도함.

- (무역) 무역의 증가속도가 지난 10년에 비해 낮아지며, 특히 농산물 무역가치의 45%를 차지하는 곡물과 오일작물, 돼지고기의 무역증가률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설탕, 양고기, 버터와 면화는 소규모로 증가할 전망.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몇몇 국가에 집중되어 공급충격에 취약성 우려

- (가격) 전체적으로 소비증가는 정체되는 반면에 충분한 농산물 제고 확보 등으로 대부분 품목의 실질가격 하락 예상

해외단신

〈동남아시아 전망〉

○ [동남아※ 지역] 전반적인 성장으로 인해 영양부족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농어업의 성장(특히, 수출주도형 수산 및 야자오일)은 천연 자원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 향후 10년간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를 통해 농업생산이 증가하며, 생산면적 증가는 전체 작물 생산 증가의 10%만 차지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자원관리 개선 및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쌀생산 지원을 농업다각화 촉진으로 전환 필요
- (소비) 소득 및 인구 증가로 쌀과 다른 농식품의 소비가 증가하지만, 식품소비의 다양화로 쌀 소비 비중은 감소※

※ 식품소비지출 중 쌀의 비중: (2011) 30% → (2016) 21→ (2026) 20

- (생산) 향후 10년간 연평균 1.8%의 순농업·어업 생산증가가 예상되며, 전 세계 생산 증가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
- (가격) 향후 10년간 동남아시아 주요 생산품목(예. 쌀, 식물성 오일)의 국제가격은 대체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국가별로는 시장개방정도 등에 따라 가격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 (무역) 주요 품목의 생산 증가, 아세안 지역의 소득 증가 및 식품 수요 다양화로 인해 기존 무역패턴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기존의 수출품과 수입품이 더 증가), 식품성 오일과 쌀 등의 수출품의 순수출이 증가, 밀, 옥수수 등의 순수입도 증가

〈평가 및 권고〉

○ 동남아시아는 중간재 및 천연자원의 투입 확대를 기반으로 농업 및 수산분야의 생산 확대를 이루어왔으나, 앞으로는 성장이 다소 정체될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이 요구됨.

○ 농수산업의 혁신이 일어나고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에 우호적인 여건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적인 분야임.

- 이를 통해 환경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농업 서비스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국제 시장에 더 통합시킬 수 있을 것임.

○ 동남아시아 농업인들에게 좀 더 견고한 우호적 환경을 만드는데 정책적인 초점을 두고 식품사슬 상 왜곡적 인센티브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국내단신 우리나라 경제전망 (2017~2018)

❑ 우리나라 경제 전망 (2017~2018년)

○ [대상국가] 한국

○ [자료출처] 기획재정부(2017.7.25.)

○ 정부, 7.2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개최하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확정 발표하면서 2017~2018년 경제 전망 내용과 함께 주요 과제도 제시

※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지속 추가·보완

○ [1. 성장]

- (2017년)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 회복, 추경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전년 대비 개선된 3.0% 성장
- (2018년) 투자가 다소 둔화되나, 일자리 확대·임금 상승 등으로 소비가 개선되며 3.0% 성장 예상

○ [고용]

- (2017년)수출·투자 개선, 건설업 호조, 추경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는 전년 대비 개선된 34만 명 증가
- (2018년) 공공 및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 등으로 36만 명 내외 증가 예상

○ [물가]

- (2017년) 유가 회복(2016: 41$/B → 2017: 50),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측 영향으로 1.9% 상승
- (2018년) 소비개선 등 상방요인에도 불구, 유가·농축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1.8% 상승 전망

○ [경상수지]

- (2017년) 수출은 회복되나, 설비투자 증가 등 수입 확대, 중 관광객 감소 등으로 720억 달러로 둔화
- (2018년) 소비회복으로 상품수지 소폭 축소, 705억 달러 전망

▌2017~2018년 경제 전망▐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 경제성장률(%)	2.8	3.0	3.0
■ 취업자증감(만 명)	30	34	36
■ 소비자물가(%)	1.0	1.9	1.8
■ 경상수지(억 달러)	987	720	705

연구지원 2017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17.7.27.)

총괄

○ [조사목적] 가축 사육규모별 가구수와 연령 및 성별 마릿수 파악하여 축산정책 수립과 축산부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전국 3,068개 표본조사구와 시도별·축종별 일정 규모이상 가축사육 농가

※ (조사기준 및 조사기간) 2017.6.1. / 2017.6.1.~18.

○ [2017년 2/4분기 가축사육마릿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육우, 돼지, 육계, △감소‥젖소·산란계·오리

2017년 2/4분기 축종별 현황(사육마릿수)

○ [한·육우] 2,786천 마리, 전 분기 대비 5.4%↑, 전년 동기 대비 1.6%↑

- (원인) 송아지 가격 호조에 따른 한우 번식우 마릿수 증가

※ 한우 수송아지 가격(농업협동조합중앙회, 천 원/마리): (2015.3~5월) 2,489 → (2016.3~5월) 3,526 → (2016.12~2017.2월) 2,768 → (2017.3~5월) 3,437

※ 한우 암송아지 가격(농업협동조합중앙회, 천원/마리): (2015.3~5월) 1,953 → (2016.3~5월) 2,593 → (2016.12~2017.2월) 2,297 → (2017.3~5월) 2,585

※ 한우 번식우 마릿수(천 마리): (2016.6) 1,468 → (2017.3) 1,450 → (2017.6) 1,513

○ [젖소] 402천 마리, 전 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0.1%↓

- (원인) 원유감산정책 영향에 따른 2세 미만 사육마릿수 감소

※ 2세 미만 젖소 사육마릿수(천 마리): (2016.6) 154 → (2017.3) 151 → (2017.6) 152

○ [돼지] 10,367천 마리, 전 분기 대비 1.0%↑, 전년 동기 대비 0.7%↑

- (원인) 모돈 증가에 따른 생산 증가

※ 모돈 마릿수(천 마리): (2016.6) 981 → (2017.3) 986 → (2017.6) 1,005

○ [산란계] 71,043천 마리, 전 분기 대비 11.2%↑, 전년 동기 대비 16.0%↓

- (원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병아리 입식 제한

※ 산란계병아리입식마릿수(대한양계협회, 천 마리): (2016.3~5월) 13,026 → (2016.12~2017.2월) 6,502 → (2017.3~5월) 11,611

※ 산란계 AI 살처분 현황(농림축산식품부, 만 마리): 2,518 (2017.5.11.기준)

○ [육계] 8,783만 마리, 전 분기 대비 31.4%↑, 전년 동기 대비 3.2%↑

- (원인) 산지가격 호조에 따른 병아리 입식 증가

※ 육계산지가격(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생체kg): (2016.3~5월) 1,289 → (2016.12월~2017.2월) 1,537 → (2017.3~5월) 2,173

※ 육계용종계입식현황(대한양계협회, 천 마리): (2016.3~5월) 1,941 → (2016.12~2017.2월) 1,651 → (2017.3~5월) 2,078

연구지원

○ [오리] 877만 마리, 전 분기 대비 16.0%↑, 전년 동기 대비 39.7%↓

- (원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입식 제한

※ 새끼오리입식실적(한국오리협회, 천 마리): (2016.3~5월) 18,975 → (2016.12월~2017.2월) 8,942 → (2017.3~5월) 11,442

※ 오리 AI 살처분 현황(농림축산식품부, 만 마리): 332 (2017.5.11.기준)

▌가축사육마릿수 총괄표▐

단위: 천 마리, 가구,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증 감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전 분기	전년 동기
소	총 마릿수	3,088	3,004	3,144	3,175	3,121	3,042	3,188	146(4.8)	44(1.4)
	- 한육우	2,676	2,596	2,742	2,768	2,717	2,642	2,786	144(5.4)	44(1.6)
	· 한 우	2,561	2,478	2,619	2,640	2,585	2,511	2,655	144(5.8)	36(1.4)
	· 가임암소	1,099	1,073	1,130	1,128	1,107	1,088	1,153	65(5.9)	23(2.0)
	- 젖 소	411	409	402	407	404	400	402	2(0.6)	0(-0.1)
	· 가임암소	293	292	288	292	291	287	290	2(0.8)	1(0.5)
	사육 가구수	99,858	98,216	97,230	96,442	95,233	94,545	93,619	-926(-1.0)	-3,611(-3.7)
	- 한육우	94,360	92,735	91,823	91,022	89,879	89,307	88,363	-944(-1.1)	-3,460(-3.8)
	· 한 우	89,403	87,573	87,089	86,203	85,040	84,262	83,479	-783(-0.9)	-3,610(-4.1)
	- 젖 소	5,498	5,481	5,407	5,420	5,354	5,238	5,256	18(0.3)	-151(-2..8)
돼지	총 마릿수	10,187	10,315	10,355	10,669	10,367	10,328	10,432	104(1.0)	77(0.7)
	- 모 돈	958	968	981	984	974	986	1,005	19(2.0)	24(2.5)
	사육 가구수	4,909	4,761	4,666	4,622	4,574	4,585	4,537	-48(-1.0)	-129(-2.8)
닭	총 마릿수	164,131	167,228	180,704	156,489	170,147	141,382	172,743	31,362(22.2)	-7,961(-4.4)
	- 산 란 계	71,877	70,177	68,281	69,853	71,043	51,608	57,383	5,775(11.2)	-10,898(-16.0)
	- 육 계	81,851	86,541	101,014	76,420	87,830	79,332	104,205	24,873(31.4)	3,191(3.2)
	- 종 계	10,403	10,510	11,409	10,216	11,274	10,442	11,156	713(6.8)	-253(-2.2)
	사육 가구수	3,004	3,071	3,323	2,867	2,993	2,575	3,205	630(24.5)	-118(-3.6)
오리	총 마릿수	9,772	9,511	10,705	8,770	8,109	5,570	6,460	890(16.0)	-4,245(-39.7)
	- 종 오 리	960	757	751	764	712	512	590	78(15.2)	-162(-21.5)
	- 육용오리	8,811	8,755	9,954	8,006	7,397	5,058	5,870	812(16.1)	-4,084(-41.0)
	사육 가구수	722	685	753	639	566	390	469	79(20.3)	-284(-37.7)

※ 가구당 사육마릿수: 한·육우 31.5마리, 젖소 76.5마리, 돼지 2,299마리, 닭 53,898마리, 오리 13,774마리

〈주요 용어 설명〉

- 한 우…우리나라 재래종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소로 털색에 따라 황소, 칡소, 흑소로 구분
- 육 우…한우와 젖소 암컷을 제외한 모든 소(고기목적 젖소 암컷 포함)
- 젖 소…젖(우유)을 얻기 위하여 사육하는 소로 홀스타인, 저지, 건지, 기타 유용종의 암컷을 말함.
- 산 란 계…계란(식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닭
- 육 계…고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닭(토종닭 포함)
- 종 오 리…새끼오리 부화용 오리알(종란)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오리
- 육용오리…고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오리

2016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자료 : 한국은행(2017.7.22.)

❑ 개요

○ [한국은행, 「2016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발표, 7.22.] 북한의 경제력을 우리의 경제시각에서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북정책에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

※ 경제성장률, 산업구조, 경제규모(명목 GNI), 1인당 GNI 등 국민계정과 관련된 지표는 우리나라의 가격,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함에 따라 이들 지표를 여타 나라들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주요 내용

○ [2016년 북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년 대비 3.9%↑,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등을 중심으로 성장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단위: 전년 대비 증감률, %) ▐

1990	1995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4.3	-4.4	0.4	-1.0	-1.2	3.1	-0.9	-0.5	0.8	1.3	1.1	1.0	-1.1	3.9
(9.8)	(9.6)	(8.9)	(5.2)	(5.5)	(2.8)	(0.7)	(6.5)	(3.7)	(2.3)	(2.9)	(3.3)	(2.8)	(2.8)

주: ( )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북한의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

구분	실 질		증감률	명 목		구성비 (2016)
	2015	2016		2015	2016	
농림어업	6,967.9	7,144.1	2.5	7,388.9	7,832.6	21.7
광 공 업	10,765.6	11,428.7	6.2	11,153.6	11,980.1	33.2
광 업	4,418.0	4,790.4	8.4	4,178.1	4,547.4	12.6
제조업	6,353.1	6,657.9	4.8	6,975.5	7,432.7	20.6
전기가스수도업	975.4	1,192.5	22.3	1,543.0	1,874.5	5.2
건 설 업	2,576.5	2,608.7	1.2	3,063.9	3,194.7	8.8
서비스업	9,505.2	9,561.6	0.6	10,987.4	11,221.4	31.1
정 부	6,860.6	6,904.4	0.6	7,942.3	8,098.4	22.4
기 타	2,644.4	2,657.1	0.5	3,045.1	3,122.9	8.7
(도소매및음식숙박)	132.6	127.5	-3.9	135.5	134.7	0.4
(운수및통신)	764.4	762.8	-0.2	891.2	915.4	2.5
(금융보험부동산)	1,749.1	1,767.9	1.1	2,018.4	2,072.8	5.7
국내총생산	30,804.9	31,996.6	3.9	34,136.7	36,103.3	100.0

○ [2016년 북한 산업구조] 2016년 중 건설업, 서비스업 비중(명목GDP 대비)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가스·수도업 비중은 상승

○ [2016년 북한 국민총소득(명목GNI)] 36.4조 원, 한국의 1/45(2.2%) 수준

○ [2016년 북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146.1만 원, 한국의 1/22(4.6%) 수준

연구지원

▌북한의 산업구조[1](단위: %)▐

구분	북한			한국	
	2014	2015	2016	2015	2016
농림어업	21.8	21.6	21.7	2.3	2.2
광 공 업	34.4	32.7	33.2	29.9	29.5
광 업	13.1	12.2	12.6	0.2	0.2
제 조 업	21.3	20.4	20.6	29.8	29.3
(경 공 업)	(6.9)	(7.0)	(6.9)	(5.5)	(5.3)
(중화학공업)	(14.4)	(13.4)	(13.7)	(24.3)	(24.0)
전기가 스수도업	4.3	4.5	5.2	3.2	3.3
건 설 업	8.2	9.0	8.8	5.2	5.7
서비스업	31.3	32.2	31.1	59.4	59.2
(정 부)	(22.7)	(23.3)	(22.4)	(10.8)	(10.9)
(기 타[2])	(8.6)	(8.9)	(8.7)	(48.5)	(48.4)
국내총생산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2015년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각 산업별 생산액의 비중
2) 도소매 및 음식숙박, 운수 및 통신, 금융보험 및 부동산 등을 포함

▌북한의 경제규모 및 1인당 GNI▐

구분	북한 (A)		한국 (B)		B/A (배)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명목GNI(한국 조 원)	34.5 (0.8)	36.4 (5.4)	1,568.4 (5.2)	1,639.1 (4.5)	45.4	45.1
1인당GNI(한국 만 원)	139.3	146.1	3,074.4	3,198.4	22.1	21.9
인구(천 명)	24,779	24,897	51,015	51,246	2.1	2.1

주: ( ) 내는 전년 대비 증감률(%)

○ [2016년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 65.5억 달러(남북교역 제외), 전년(62.5억 달러) 대비 4.7%↑

- (수출) 28.2억 달러, 전년 대비 4.6%↑, 동물성생산품(74.0%), 광물성생산품(8.9%) 등이 증가
- (수입) 37.3억 달러, 전년 대비 4.8%↑, 식물성생산품(24.8%), 섬유류(20.5%) 등이 증가

▌북한의 대외 교역규모(남북교역 제외)(단위: 억 달러)▐

구분	북 한 (A)		한 국 (B)		B/A (배)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교역규모	62.5 (−17.9)	65.5 (4.7)	9,632.6 (−12.3)	9,016.2 (−6.4)	154.1	137.7
수 출	27.0 (−14.8)	28.2 (4.6)	5,267.6 (−8.0)	4,954.3 (−5.9)	195.1	175.7
수 입	35.6 (−20.0)	37.3 (4.8)	4,365.0 (−16.9)	4,061.9 (−6.9)	122.6	108.9

주: ( ) 내는 전년 대비 증감률(%)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